

별개 발병이나 접촉 감염이나

전북 익산과 김제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AI가 발생한 익산시 함열읍(1차)과 황등면(2차), 김제시 공덕면(3차) 모두 23번 국도변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달리 발병 원인을 설명할 길이 없다. 특히 3차 발생지는 AI가 처음 확인된 1차 양계장에서 남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서 진정되는 듯 했던 고병원성 AI가 이미 경계 지역(반경 10km)을 벗어나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방역 당국은 12일 "매추리알 농가는 양계 농가와 사료운반 등 교류가 전혀 없어 현재로서는 익산의 1, 2차 발생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방역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 농고 설왕설래=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은 월동기를 맞아 이동을 시작한 철새가 농장의 먹이를 먹거나 분비물을 흘려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에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 금강호 일대의 철새 분변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축산농가의 견해는 다르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좁은 면적에 많은 가금류를 사육하는 우리나라의 밀집형 양계사육 형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 및 장비, 혹은 신고 이전의 출입자 등에서 감염 경로를 찾고 있다. 익산지역에서만 AI로 살처분에 동원된 인원은 2천여명이 넘고 각종 장비도 700대 이상이다. 방역당국은 살처분과 매립을 위해 투입된 트럭과 굴착기 등 700여대에 대해 작업 뒤 소독과정을 거쳤지만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철저한 사후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발생-신고-방역당국 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주일 안팎이어서 본격적인 방역이 시작될 즈음에는 이미 외부로 전파돼 '버스가 지난 뒤'라는 지

■ 조류인플루엔자(AI) 원인 오리무중

당국 "철새가 전파" 전문가 "인력·장비 원인" 곡성 농장 등 전남지역 이상 징후 아직 없어

적도 있다.

전남은 징후 발견 못해=전북에서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근접한 전남도의 가축방역 당국도 연일 초긴장 상태다. 더욱이 지난 11일 곡성의 한 매추리 농장과 김제의 AI발병 농장과의 접촉사실이 확인돼 우려가 컸으나 12일 오후까지 별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 가축방역당국은 지난달 19일 익산에서 AI 발생 직후 도내 순천만, 영산호, 영

암·금호호 등 철새 도래지에서 조류 분변검사(철새 140점, 텃새 40점)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조류 분변검사 결과 AI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전화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도축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오리 3천340마리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이후 고병원성 AI가 차

레로 발생한 익산시 함열읍~익산시 황등면~김제시 공덕면은 강진에서 출발해 충남 천안에 이르는 23번 국도상에 위치해 전남 서남부지역으로 남하 우려도 있고 있다. 이는 23번 국도를 따라 닭고기 업체와 사료공장이 많이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한 사료 차량 등에 의해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익산·김제는 겨울철새가 많이 몰려드는 군산 금강호와 가까워 이번 AI를 철새가 옮겼을 경우 전남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영산호와 고천암호, 영암·금호호를 비롯해 순천만 등 다수의 철새도래지가 분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도 방역당국은 별다른 AI징후가 없어도 불구하고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전북 익산·김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12일 영광군 방역요원들이 전남·북 경계인 법성을 용덕리 길목에서 도내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위지량기자 jwi@kwangju.co.kr

4개 실국 업무추진비 1억5천만원 편성 문화정책실, 문화체육정책실로 변경

광주시의회 행자위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제2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비 과대 계상과 민선 제4기 조직개편 안 등이 논란이 됐다.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는 이날 문화정책실 추경안 심의에서 불거졌다. 2차 추경이 반영되는 시기는 기껏해야 10~20일 정도. 그러나 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기획관실·문화정책실·공보관실 등 3개 실국에 각 3천만원씩 1억2천만원, 자치행정국에 6천만원 등 총 4개 실·국에 1억5천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새로 편성됐다.

이날 행자위 심의에서 나중찬·조광항·김남일 의원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비용인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진태 문화정책실장은 "속사정이 있어서 밝히기 어렵다" "대 정부 관계 등에 소주 한정

마시는 등에 사용된다"고 답했다가 의원들로부터 "불성실한 답변"이라는 질책을 받았다.

조직개편안=광주시의회 행자위는 이날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기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일부를 수정 의결했다. 수정의 내용은 '문화정책실'을 '문화체육정책실'로 명칭 변경한다는 것.

행자위 의원들은 기구 관련 조례 개정안과 관련, ▲복지여성국을 사회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을 신설, 여성정책과 청소년육성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개편안은 '여성분야 확대'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설되는 도시미개척본부의 업무와 권한 범위가 모호하며 ▲문화정책실과 관광체육국을 문화정책실로 통폐합할 경우 체육 분야의 업무기능을 약화시켜 내년 전국체전 준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집중 지적했다. 행자위는 또 정원에 관한 조례개정안도 심의하는 검토를 거쳐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줄이면 된다" '인턴보좌관제' 도입 위한 꼼수?

광주시의회가 유급인턴보좌관제 실시하는 대신, 사무처 공무원 수를 4명 축소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키로 하면서 보좌관제 도입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사무처 직원들의 반발과 기존 인사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유급인턴보좌관제 실시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뜨겁지 않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 대안이란 비판도 있어서 사무처 정원 축소한 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사무처 정원 축소 문제로 조직개편안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시의회가 유급인턴보좌관제 실시와 조직개편안 처리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 가능성도 높다. 이 사무처 정원 축소는 당초 진선기 운영위원장이 유급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집행부 측에 반대 급부로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 진 위원장은 "의회 사무처 인력

상황을 파악한 결과, 4명을 축소하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때문에 이들 4명에 대한 비용을 인턴보좌관제를 도입(연간 1억7천여만원)하는데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12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의회 사무처 직원 정원과 관련된 부분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전화됐다.

조호권 행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광주시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 중 기구에 관한 부분은 행자위에서 수정 의결했지만 정원 관련 조례 개정안은 의회 사무처 직원 운용과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기로 했다"며 "운영위에서는 의회 사무처 정원 58명 중 54명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는 정치자금 후원의 활성화, 정책선거의 진흥, 유권자의 투표참여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4년 3월 전면개정된 정치관계법이 너무 엄격해 비현실적인 조항이 적지 않고 오히려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킨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선후보 정치자금 '숨통'=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정치자금 조달에 활로를 열어준 부분이 눈에 띈다.

선관위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대선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대선예비후보들 정치자금 모금 가능 여행자·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 투표

수 없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고려해 선거일 1년전부터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이른바 '빅3'를 비롯해 여야 대권주자군이 사실상 캠프를 가동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캠프 운영자금의 출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금지와 정당의 후원회 폐지 등에 따른 정당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정책·미디어선거 강화=대선후보가 정책공약집을 작성해 유권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정책선거를 강화하고, 대담·토론회 불참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지 않음으로써 미디어 선거운동 활성화를 꾀했다.

또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방송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통합한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선관위 산하에 신설해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여론조사기관이 사전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했다.

투표참여 확대=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기 재외공관원, 상사원, 유학생, 파병부대원, 여행자 등 해외 체류자들의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2003년, 2005년에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또 투표 참여자에게 국립공원, 박물관 등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할인하는 우대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투표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경우 투표율 제고에 대한 정당별 이해득실에 차이가 있는데다 표심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연필뉴스

조이트레빌

여행사 정보: 02-2962-1100, 049-278-8110, 031-122-7901, 030-461-0007, 030-296-1271

가을방학 특선 일꾼은파출부

가을방학 특선 일꾼은파출부... (text about cleaning services)

가을방학 특선 일꾼은파출부

가을방학 특선 일꾼은파출부... (text about cleaning services)

가을방학 특선 일꾼은파출부

가을방학 특선 일꾼은파출부... (text about cleaning services)

공부방

공부방... (text about tutoring services)

가을방학 특선 일꾼은파출부

가을방학 특선 일꾼은파출부... (text about cleaning services)